

정보문화

(성대신문 2000.12.4, 고영만)

변화의 어떠한 본질적 요소들이 정보사회를 지시하는 것일까? 흥미롭게도 80년대까지는 정보사회에 대한 구상이 정보 또는 지식과 관련되어 논의되었으나, 90년대 초부터는 정보사회를 이야기 할 때 정보보다는 IT로 일컬어지는 총체적 정보기술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생활 형태와 생활 표현에서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과 매체들을 올바르게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즉 정보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급한 사회적 요구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문화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동의의 형성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며 사회계층, 고용관계, 권력관계 그리고 개인적 권리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정보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계층화의 문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분리되는 것과 관련된다. 이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향은 의, 식, 주와 더불어 정보의 사용가능성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정보의 사용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문화가 그 사회의 복지 수준과 번영의 정도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고용관계의 논의는 정보기술과 관련되는 경제영역에서 적지 않은 새로운 직업이 생성되고는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Tele-working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들이 총체적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를 보상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일자리를 새롭게 또는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노력과 사회적 단결의 형태가 그 사회의 고용과 관련된 정보문화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정보문화는 정치적 측면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 시스템들은 가능한 한 행정적, 경제적 수단을 통해 정보를 통제하고자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의 자유와 이에 상응하는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 사회의 지속적 노력이 전개될 것이다. 권력 관계에서의 정보문화는 결국 정치적 각성의 문제이며, 한 사회의 정보문화가 민주적 문화요소와 관련된 정도에 따라 그 사회의 정치적 성숙도가 평가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의 도입은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해당자들에 대한 효용의 극대화라는 원칙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 시스템의 도입과 사용으로부터 파생하는 갈등과 충돌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개별국가 차원의 법적 규제(지적소유권,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균등한 권리를 내포할뿐 아니라 책임도 뒤따른다”는 의식의 형성 수준, 기술적으로는 전자 출판의 품질 기준과 표준 정의의 정도가 정보윤리와 관련된 정보 문화의 척도가 될 것이다.

정보문화란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기술이 지니는 긍정적 동력이라 할 수 있는 개인과 사회를 친화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따른 위험의 잠재 요소를 극복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설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